

##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 1. 총사회복지지출의 수준과 추이

-사회복지의 총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OECD국가들의 다층지출구조에 대해 지출수준과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총사회복지지출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속도가 매우 높아 재원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복지주체의 다층구조별 역할을 보면 공공복지는 소득분배와 사회통합을, 법정민간복지는 노후소득보장을, 자발적민간복지는 나눔문화의 확산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령·질병·실업 등 사회위험을 공공복지, 법정민간복지, 자발적 민간복지 등 다층구조로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 (2008)는 112조 1,720억원으로 GDP대비 10.95%임

○다층구조는 3개의 복지주체로 구성되었으며 급여범위를 보면, 공공복지 는 사회복지관련 정부의 재정지출과 노령연금, 건강보장,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급여 등, 법정민간복지는 고용관련 기업의 법정급여로 법정퇴직금(기업연금), 질병유급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자발적민간복지는 민간 단체의 공동모금,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기업의 자발적 복지 등임

□ 총사회복지지출이 추계된 지난 18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7.5%로 이의 속도는 기준년도의 금액이 4년 후는 약 2배, 7년 후면 3배, 그리고 18년 뒤면 18배 증가하는 빠른 증가율임

○3주체 중 자발적민간복지의 증가율이 29.4%로 가장 높고 공공복지는 16.5%, 법정민간복지는 약 15% 순임

[표1]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의 추이(1990-2008)

(단위: GDP 대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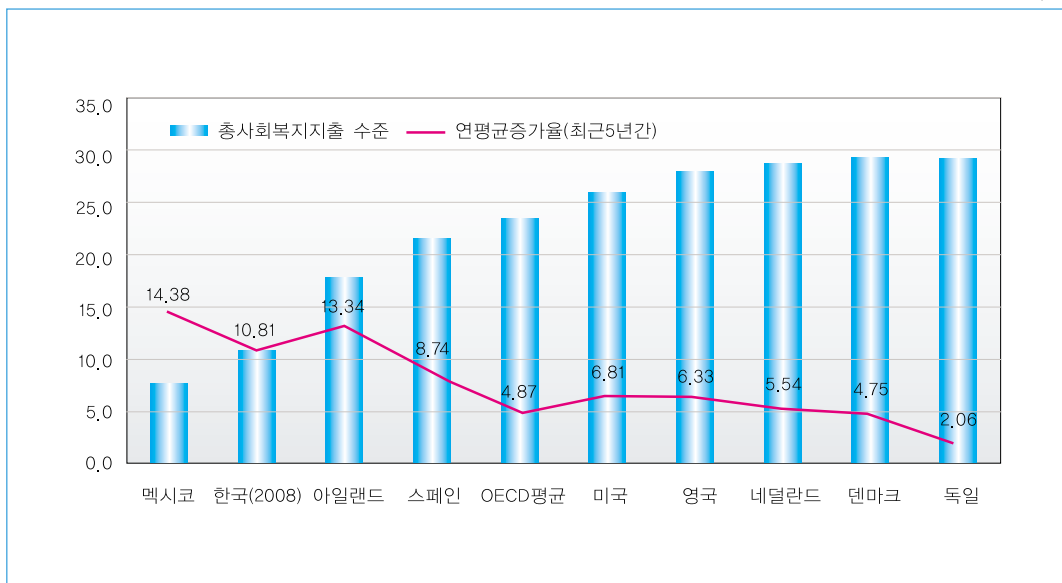
년도	계		공공복지 (A)	법정민간복지 (B)	자발적민간복지 (C)
	금액	A+B+C			
1990	6,141	3,29	2,91	0,27	0,11
1995	22,524	5,65	3,33	0,32	2,00
2000	45,134	7,48	4,74	0,74	2,00
2005	75,513	8,73	6,42	0,57	1,73
2006	88,981	9,79	7,30	0,58	1,91
2007	98,650	10,12	7,48	0,59	2,05
2008	112,172	10,95	8,30	0,61	2,05
		(100,0)	(75,8)	(5,5)	(18,7)
연평균증가율	17,51		16,50	14,98	29,43

주: 2008년도 총사회복지지출은 추정치로 앞으로 연구될 실제치와 다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10.95%)은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평균은 23.7%, 덴마크와 독일은 30%수준임
  - 우리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10.8%)은 OECD국가 중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음
  - 우리나라는 OECD평균증가율(4.9)의 2.2배로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복지제도 확충과 성숙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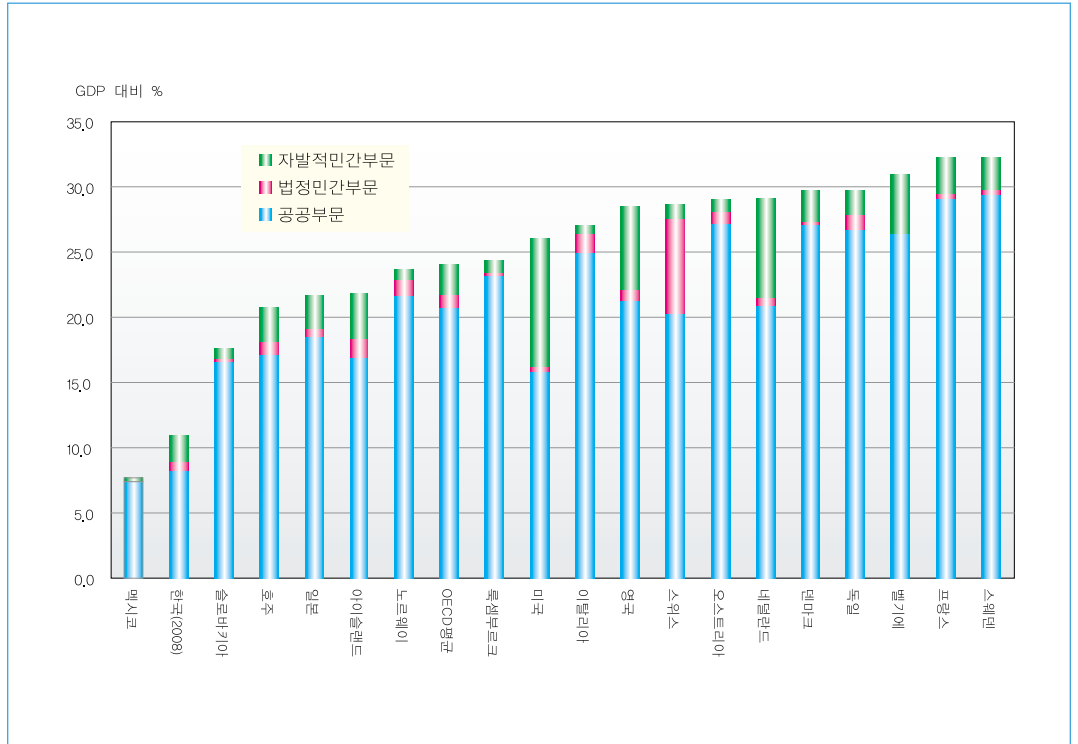
[그림1] 총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연평균증가율의 비교

(단위: GDP 대비%, %)



- 우리나라 다층구조의 구성을 분석하면 정부와 사회보험의 '공공복지' 가 약 75%를, 기업의 '법정민간복지' 가 5%, 사회의 '자발적민간복지' 가 약 20%를 부담함 (표 1 참조)
  - 공공복지의 지원에 자발적 민간복지가 꾸준히 증가하여 법정민간 보다 약 4배나 높게 기여함
- OECD국가들은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재정지출의 다층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이 중 자발적민간지출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이며, 법정민간지출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임

[그림2] 총사회복지지출 다층구조의 국제비교



## 2. 공공복지지출의 수준과 조세부담

- 우리나라 2008년도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8.3%로 OECD평균(20.6%)의 40%에 해당함. 또한 공공지출 수혜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의 비율(5%)도 OECD평균(14%)의 약 40%로, 우리의 복지수혜와 부담수준을 OECD평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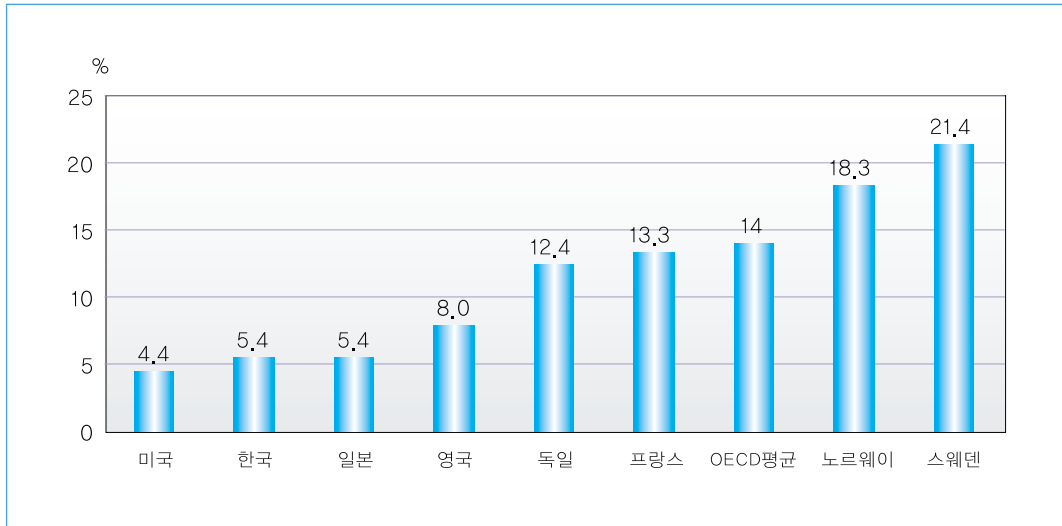
[표2]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조세부담율의 국제비교

(단위: 경상GDP대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영국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스웨덴
공공지출(A)	8.3	15.9	18.6	20.6	21.3	21.6	26.7	29.2	29.4
조세부담(B)	0.45	0.7	1.0	2.9	1.7	3.9	3.3	3.9	6.3
비율(B/A*100)	5.4	4.4	5.4	14.0	8.0	18.3	12.4	13.3	21.4

주: 이전소득자의 직·간접세만 포함

[그림3]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조세부담비율주의 국제비교



주: 조세부담비율 = 공공지출 수혜자가 부담하는 직 · 간접세액/공공복지지출액\*100

○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양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미래 경제활동을 할 출산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안정된 복지재원의 확보와 발굴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 3. 공공복지지출의 비중과 소득불평등

□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낮은 국가에 비해 소득 분배효과가 높음

○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율(65세이상) 또한 낮음

○ 반면 공공복지 비중이 낮은 한국, 영국, 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노인빈곤율도 높음

· 다만,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일본은 소득불평등이 낮으나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3] 공공복지 비중과 소득분포, 빈곤율의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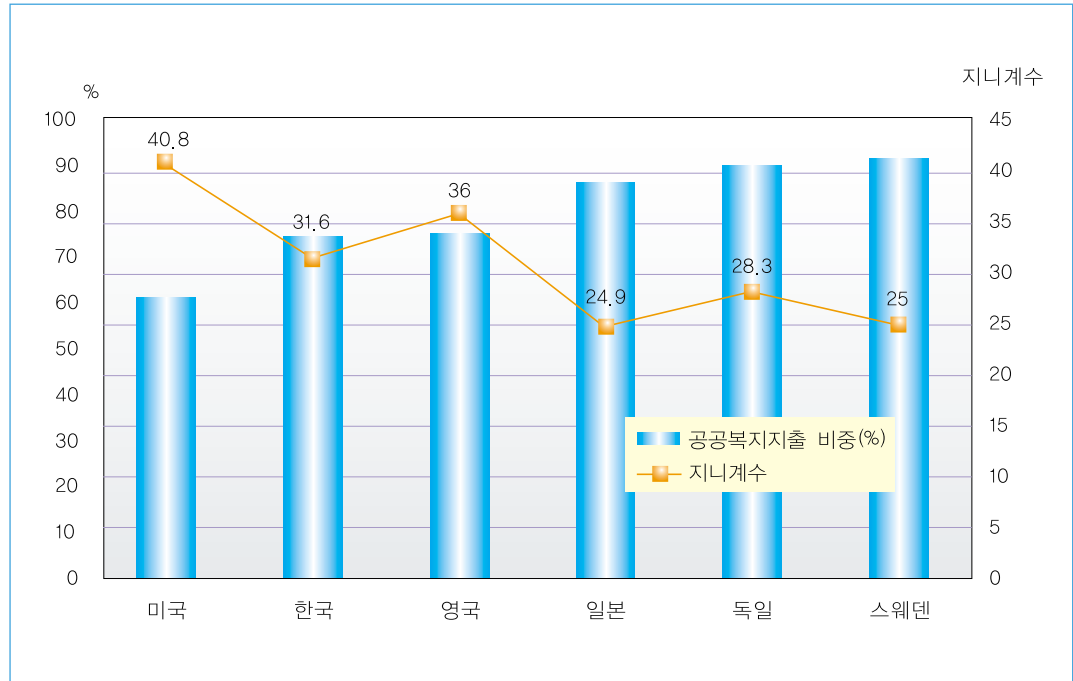
구분	한국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	미국
공공복지 비중	74.2	91.3	89.9	86.1	75	61.2
지니계수	31.6	25.0	28.3	24.9	36.0	40.8
노인빈곤율(65+)	45.1	6.6	9.9	22.0	10.3	23.6

주: 자료는 2000년대 중반

자료: OECD, SOCX, Pension at a glance, 200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

[그림4] 주요 OECD국가의 공공복지지출 구성비와 지니계수 비교(2005)



○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소득분배측면의 사회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어 분배효과가 높은 반면, 근로연계의 법정민간복지와 대부분 현금보다 현물중심인 자발적 민간복지는 소득분배 효과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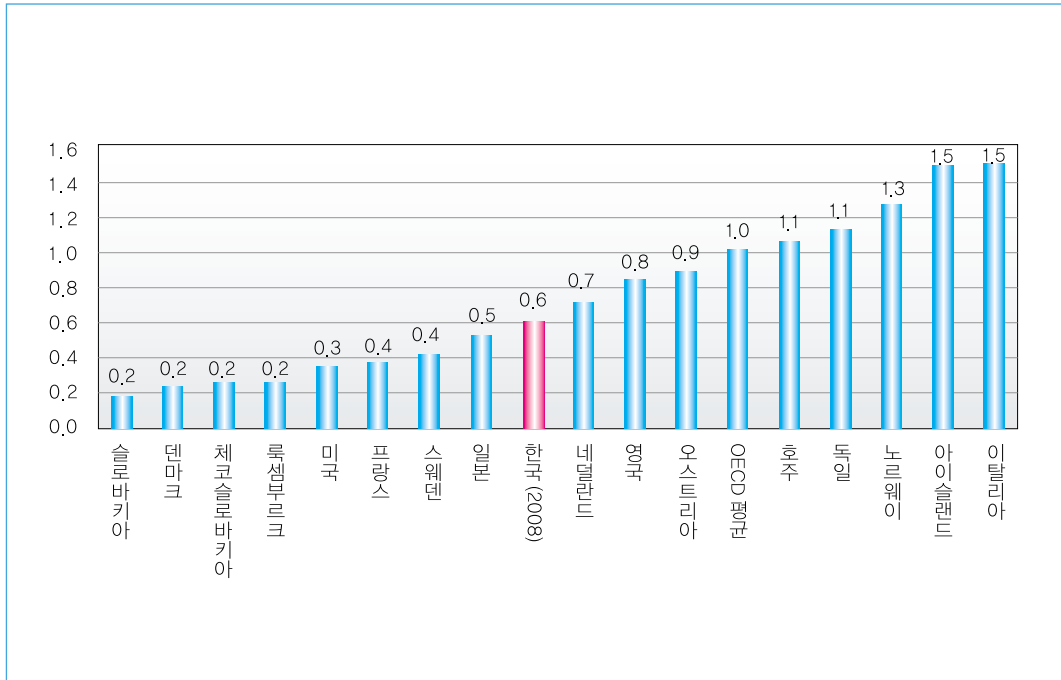
#### 4. 법정민간지출의 수준과 기능분석

□ 법정민간복지지출은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지만 제도나 법적 근거가 있는 지출로 우리나라는 0.6%(GDP대비, 2008)로 OECD평균(1%)의 60% 수준임

○ 이 지출은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국가들에서 두드러지며 대표적인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으로 복지국가 위기시 공공지출의 한계를 법정민간지출로 보완한 국가들임

[그림5] OECD국가들의 법정민간지출 수준(2005)

(단위: 경상GDP대비 %)



□ 법정민간복지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노령급여'(기업연금)와 산업재해 이외의 '근로무능력급여'(질병급여)에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음

○노령·근로무능력급여에 90%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한국이, 오로지 근로무능력급여에만 지출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임

□ 노동시장 이중화로 '실직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어 사회안전망 요구

○최근 빈곤의 증가는 노인층의 빈곤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기인함

·가주주가 근로연령(15-64세)인 가구의 빈곤율: 8.8%(1997) → 11.1%(2008, 한국노동연구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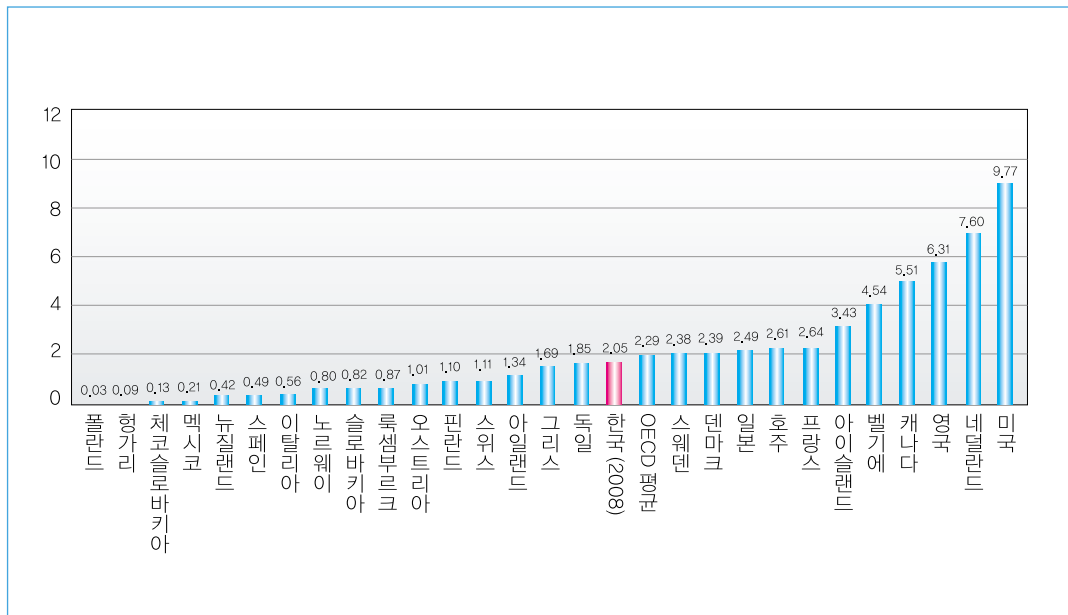
○아울러 비빈곤상태에 있던 가구의 가구주 실직시 절반이상이 빈곤상태로 전락하고 있어 정책개입이 필요

## 5. 자발적 민간지출의 수준과 기능분석

- 우리나라의 자발적민간복지지출은 2.05%(GDP대비, 2008)로 OECD평균(2.29%)과 유사한 수준이며 법정민간지출(0.6%)의 3.4배임
- 자발적민간복지 지출은 사회와 시장으로부터 복지욕구 충족이 부족한 국가 또는 사회복지 재정이 아직 낮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며, 이들 국가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공공지출의 한계를 이 지출로 보완하고 있음
  - 이들은 경상GDP 대비 5%이상의 국가들(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임

[그림6] OECD국가들의 자발적민간지출 수준(2005)

(단위: 경상GDP 대비 %)



- 자발적민간복지지출은 공공지출의 보충으로 '노령급여'(이전(former) 공무원 또는 민간부문근로자에 대한 연금지원)와 '보건급여'(보건의료)에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지원( '기타' )에 87%를 사용
- 최근 경제위기로 근로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지속되는 여건에서 공공복지 혜택이 부족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참여 등 나눔문화의 확산이 요구됨

## 6. 정책과제

-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이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의 성숙과 저출산 고령화현상의 심화, 복지수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으로 복지지출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책수립이 요구
  - 공공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부역할을 보완하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복지자원의 확충과 개발이 필요함
  
- 기업복지의 노동시장지위간 형평성 제고와 세대갈등을 극복하는 사회정책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이원화의 심화, 기성세대와 노동시장진입세대의 갈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지위가 복지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
  
- 개인 기부문화 조성 및 종교계의 적극적 참여
  - 기부문화는 확산되고 있으나 단체모금의 비중(70%)이 큰 반면 개인(30%) 기부액은 낮은 수준임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성이 요구됨으로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사회공헌과 기부문화 조성 및 종교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

고경환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문의사항 (khgho@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